

 금융위원회	<div>보도반박</div>		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 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21.11.23.(화)	
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금융혁신과장 박 주 영(02-2100-2530)	<b>담 당 자</b>	박 정 원 서기관 (02-2100-2533)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**제 목 : 보도된 내용은 금융위원회 공식의견이 아닙니다.**  
**[머니투데이 11.23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]**  
**[매일경제 11.23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]**

## 1. 기사내용

- 머니투데이는 11.23일자 「“금융위의 ICO=IPO?...가상자산업권법 ‘정부안’ 뜯어보니」 제하 기사에서
  - “23일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에 금융위가 ‘가상자산업권법 기본 방향 및 쟁점’ 형태로 입장을 밝힌 것은 그 출발점으로 해석된다”
  - “금융위는 가상자산업권법 관련 큰 틀에서 유가증권(주식)의 발행, 유통, 불공정거래 자본시장법 등을 참고한 것으로 풀이된다.”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- 매일경제는 11.23일자 「정부 ‘가상화폐법’ 준비...시세조작땀 부당이익 3~5배 벌금」 제하 기사에서
  - “앞으로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으로 가상화폐 거래에서 부당이익을 얻으면 최소 1년 이상 징역, 최소 3배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될 전망이다.”
  - “또 협회를 통해 민간에 일정한 자율규제 권한을 부여하되 금융당국은 시정명령권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필요최소한 감독권을 보유하기로 했다” 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## 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- 동 내용은 국회계류중인 가상자산 관련 여러 의원입법안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,
  - 금융위원회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  
prfsc@korea.kr



## 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